

새만금 해양 관광권을 '新 허브' 로

전북도 관광활성화 전략회의... 섬 관광지 조성 방안 집중 토론 · 고군산군도 개발 마스터플랜 정립

전북도가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새만금 해양 관광권을 '서해안 최후의 新 해양관광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 계획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타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성장시켜 전북에 생애주기별 안정적 인 좋은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14개 시·군 대표관광지 육성 시책을 비롯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 등과도 연계해 전북형·맞춤형·통합형·글로벌 관광 추진 전략을 갖 추는 이른바 '토탈관광 2단계' 정책으로 전북의 관광여행시장 외연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도 간부진과 군산시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선유도 현장에서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갖고 일자 리 창출과 머물고 싶은 섬마을 육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을 벌였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새만금 해양관광 권을 구축하고 명품화 시키기 위한 가속 행보로 해석된다.

도는 이날 섬 모델 개발의 전문가로 꼽히는 명소건설팀 이상진 소장을 초청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섬 관광지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천혜의 비경이 살아숨쉬는 고군산군도 개발 마스터플랜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이 관광수요를 지속 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재정투자 확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관광일 자리 창출을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날 논의에서는 청년은 물론 시니어, 노인, 사회적 약자 등 전 계층이 관광산업에



4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도 간부진과 군산시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선유도 현장에서 전라북도 관광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가졌다. 송 지사 일행이 선유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안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 정책적 일자 리 창출 전략으로 대표관광지와 생태관광 지 조성의 내실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이 뿐만 아니라 도내 10개 시·군에 걸쳐 추진 중인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계획과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과 함께 연구용역 중인 전라천년문화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간여행 101' 프로젝트와 백 제역사문화 사업 등 대한민국 테마여행 10 선 지역명소화 사업의 추진 필요성도 언급됐다.

전북도는 이같은 방안을 시책으로 반영 해 추진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관광지원 개발 및 진흥사업 재정투자에 따른 경제 적 파급효과로는 연평균 생산파급효과는 5,273억원, 부가가치 창출 4,235명으로 예측했다.

또한 전북권 국내의 관광객의 평균 관광 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연평균 생산파급 7,308억원, 부가가치 창출 3,105억원, 고용 1만 5,286명의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앞으로 청년실업 타개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고군산군도를 서 해안 레저관광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춘석, 안전보호 용복합제품 육성 예타통과 환영

소방관 방염복 등 안전관련 특수 섬유소재를 집중 육성하는 국가사업이 첫발을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시갑)은 총 사업비 523억 규모의 안전보호 용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예코융합섬유연구원을 중심으로 추진 되는 동 사업은 2009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이후 익산 지역에 실시되는 최초의 예타 사업이다.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예산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실시된다.

동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이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 다. 작년 4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원내비서실장으로 대통령 공약에 포함시킨 것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발굴·육성)에 선정되는 막 후 활동을 벌였다.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기재부 심사가 지연되는 등 고비가 올 때마다 경제부총리를 직접 만나 당위성을 역설하고,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연계시키는 등 사업 통과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다.

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된 익산 섬유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안전보호 섬유시장은 연평균 6.8%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 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다"며 "안전보호 용복합제품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 소득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양용모 도의장, 고이경해 열사 묘역 참배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장은 4일 농민운동가인 '고 이경해 열사' 묘역 참배로 의장 선출 이후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양 의장은 이날 이해숙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수에 있는 고 이경해 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3선 도의원 출신인 이경해 열사는 지역농업 발전과 한국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농민 운동가였다"며 "그러나 현 실정은 유언으로 남긴 식량의 자급자족에 기초한 식량주 권을 지켜내기 보다 국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개방이 가속 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WTO체제의 부당성을 운몽으로 던져 고발했던 송고 한 정신과 이념을 되새겨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도의회부터라도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업농촌을 살려내 는 일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추미에 "한국당 개헌안, 민심 없고 야심만 가득"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 대해 "역시나 민심은 없고 야심만 가득 담긴 기대 이하의 개헌안이었다"고 평가 절하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국당 당론에 고스란히 담긴 내각제 야심은 개헌을 집권여당 도구로 활용한 그들의 과거 모습과 조금도 바뀐 것이 없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라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 을 열어보면 압도적 지지 받는 대통령제를 의식해서 말 을 바꾼 '무너진 대통령제 알고 보면 내각제'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특위, 헌정특위까지 16 개월간 논의를 마감하고 조문안 합의에 나서달라"며 "국회 가 열릴 때마다 상습적으로 보이듯하는 야당에게 얼마나 기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김춘진 "미세먼지와의 전쟁 선포"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 보는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 사에 당선되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우선 임기 중 정부출연 연구 소와 대학의 연구개발(R&D) 역량을 총동 원해 도내 공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충남 화력발전소 등 인근 지역 공장의 미 세먼지 차단에도 전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중국 산동 성과 자매 결연을 맺는 등 미세먼지의 절 반기량을 날려 보내는 중국과도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기술협력 등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식목일 공휴일 지정법' 대표발의

미세먼지 대책 일환... 도시숲이 '미세먼지 잡아먹는 천연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식목일을 법 정공휴일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4 일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도시숲 확충'이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2017.5) 도시

숲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에 비해 평균 26%, 초미세먼지 농도는 41%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잡아먹는 천연 공기청정기'라고 비유될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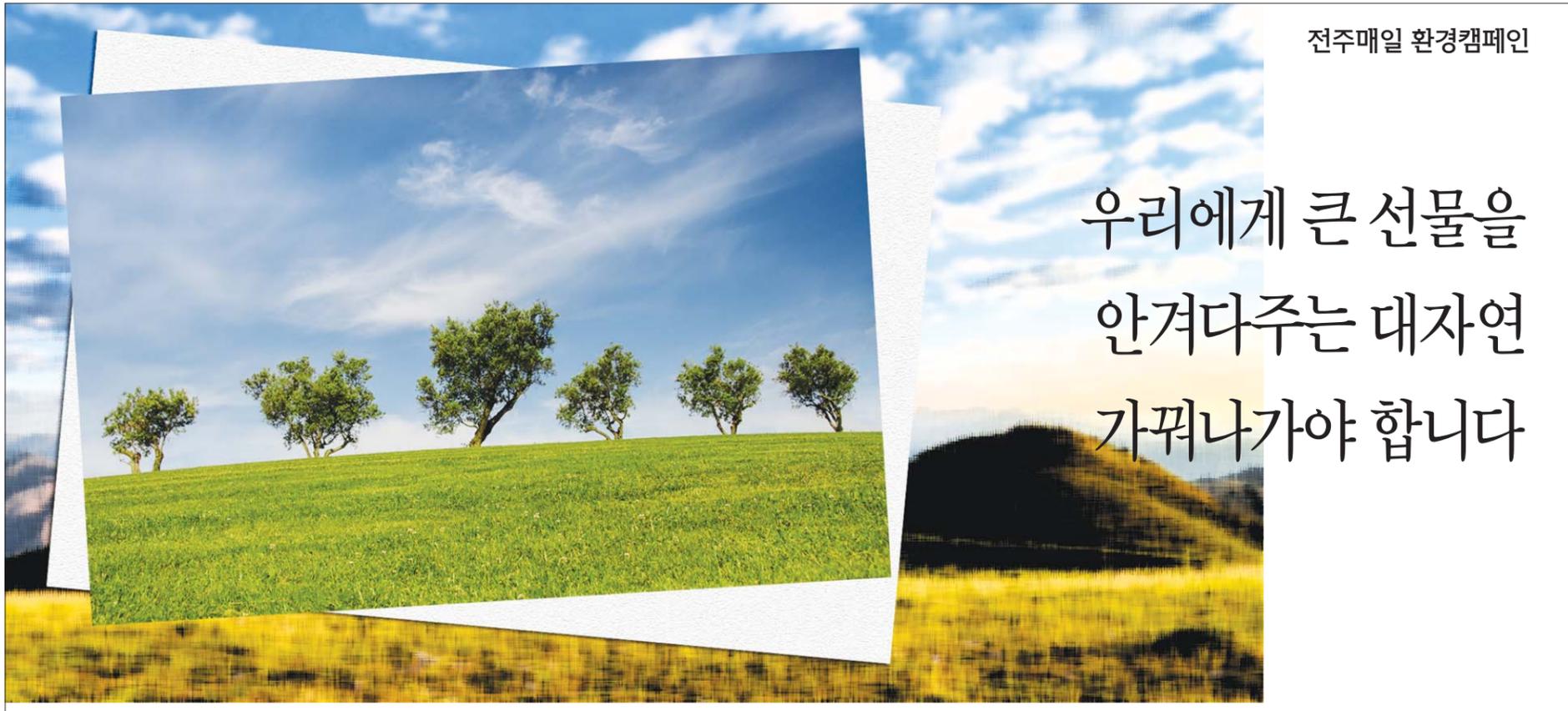
최근 산림청과 서울시는 '도시숲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수원시 또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식목일은 1949년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다

가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일수가 줄게 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이용호 의원은 "식목일은 단순히 '나무 심는 날'을 넘어 환경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뜻 깊은 날이었지만, 공휴일에서 제 외되면서 의미가 퇴색됐다"며, "나무를 심 고 싶어도 쉬는 날이 없어서 실천하지 못하고, 환경에 무심해진 게 현실이다" 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